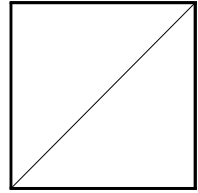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247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7. 21. (제 14 차)

의  
결  
사  
항

(주)론포인트소셜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연월일	2021. 7. 21.

## 1. 의결주문

(주)론포인트소셜대부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주)론포인트소셜대부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의무를 위반한 (주)론포인트소셜대부에 대하여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2조(검사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및 <별표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및 <별표2>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1차 제재심의위원회(2021.1.14.) 심의필

<별지>

(주)론포인트대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경고

## 2. 조치사유

### 가.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고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018.2.8. 이후 연 24.0%(2016.3.3.~2018.2.7. 기간 중 연 27.9%)

-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간주이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주)론포인트소셜대부는 2017. 1. 6. ~ 2019. 9. 24. 기간 중 ○○○○ 등 71개 차주에게 131건의 대출(총 419억 4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부이자를 징수하고, 동 과정에서 (주)론포인트(P2P연계대부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가 차주로부터 플랫폼 이용수수료 등을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동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보다 406,184,485원을 초과하여 수취하였음

###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관 계 법 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채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⑥ (생략)

**제12조(검사 등)** ①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 등에 대한 검사로 한정한다)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 ⑥ (생략)

⑦ 시·도지사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대부업자 등에게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⑧ ~ ⑨ (생략)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생략)

② ~ ⑤ (생략)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3. 직원의 면직요구
- ⑦ ~ ⑧ (생략)

<별표1> 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사유(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6항 관련)  
 1~11의2. (생략)  
 1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자를 받은 경우  
 13.~25. (생략)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⑤ (생략)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생략)

### 舊 제5조(이자율의 제한) (2018.2.8. 대통령령 제28420호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① (생략)

-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7.9를 말한다.
-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7.9를 단리로 환산한다.

<별표2>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7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 가. ~ 나. (생략)
  - 다.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 당 조 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더.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가. (생략)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 라. (생략)

2. ~ 9. (생략)

② (생략)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주)론포인트소셜대부

2. 제재조치일 : 2021. 7. 2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경고
임 원	문책 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고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018.2.8. 이후 연 24.0%(2016.3.3.~2018.2.7. 기간 중 연 27.9%)

- 「동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이외의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간주이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P2P대출 가이드라인」(‘18.2.27.)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19.2.19.)으로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이자율 규제 대상임

- (주)론포인트소셜대부는 2017. 1. 6. ~ 2019. 9. 24. 기간 중 ○○○○ 등 71개 차주에게 131건의 대출(총 419억 4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부이자를 징수하고, 동 과정에서 (주)론포인트(P2P연계대부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가 차주로부터 플랫폼 이용수수료 등을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동 차주로부터 「동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보다 406,184,485원을 초과하여 수취하였음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가계금융과	저축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513	02-3145-7407